

##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놓고 서해안 지자체 '아우성'

전남도 “구역(zone) 나눠 적정 수용해 밀집도 조정 추진”  
해수부, 백사장 크기 기준 산출...조수간만의 차 커 ‘난해’  
무안군, 전남 유일 사전예약제 동참 안해 “개장 안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올 여름 실시하는 해수욕장 사전예약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일선 지자체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코로나19로부터 이용객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사전차단을 위해 전남지역 11개 시·군 14곳의 해수욕장에 대해 시범 실시된다.  
사전예약제가 실시되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정부에서 구축한 ‘비더여행’ 누리집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사전 예약 이용객들은 해수욕장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체크 등을 거쳐 손목밴드를 착용 후 지정된 출입구로 입장할 수 있다.  
이로써 정부는 이용객이 예약시스템을 통한 해수욕장별 이용객 혼잡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일부 해수욕장으로 집중된 이용객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분산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해수욕장 사전예약제의 실시 시기가 일몰적이었고, 이를 위반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넓은 해수욕장을 차단하거나 출입을 통

제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전라남도도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zone)을 나눠 적정 수용 인원으로 이용객을 분산해 밀집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전 예약제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7월3일 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7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도내 1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과 주민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현장 예약이나 전화예약으로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남도가 현장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사전 예약제가 확고하게 시행될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신안군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관광객은 이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예약이 안된 사람들은 인접 타 해수욕장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예약제를 모른 상태에서 섬까지 찾아 온 관광객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과 방역 등 신경쓸 게 많은데 입장 제한으로 민원까지 발생할까 걱정이야”며 “중양 정책을 모조진 반대할 수도 없고, 차라리 개장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털어놴다.



신안군 입자도 대광해수욕장 전경

해수욕장 입장을 위한 적정 인원 산정도 제각각이다.  
해수부 지침은 백사장을 가로(6m)×세로(6m)로 나눠 한 칸에 5명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출하라는 입장이나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어느 시점의 백사장 크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난해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썰물 때는 백사장이 넓으나 밀물 때는 백사장이 거의 잠기는 해수욕장도 있다”며 “결국 백사장 뒤편 해송숲 면적을 기준으로 출입 인원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해남군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 해수욕장 입장객 총수를 기준으로 일일 평균을 매겨 하루 300명으로 정원을 정했다”

며 “정원이 다 차면 예약 자체가 안된다. 당연 예약을 안한 사람은 해수욕장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실시 시기도 각 지역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전남의 A지역은 해수욕장 개장일이 7월13일이라고 밝히고, B지역은 올 여름 피서 피크 시기인 7월18일부터 8월9일까지만 해수욕장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무안군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전남 1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번 사전 예약제에 동참하지 않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려는 백사장 구역의 표시가 어렵고 일부 해수욕장은 사유지

를 끼고 있어 동참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해수욕장협의회 회의 결과 아예 올해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전 예약제로 지정된 해수욕장의 전 면적에 운영하라는 방침”이라며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온 이용객은 인접 구역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에 대한 단일한 지침은 없다.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맞게 운영하라는 지침”이라며 “현재 지역별 상황을 체크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고흥군 “지난해 귀농인 전국 1위...인구감소 극복정책 성과”

고흥군은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고흥군이 최근 농림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귀농인 통계결과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위 5개 지역은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고창군 순이다.

2019년의 경우 귀농인은 전국적으로는 전년보다 4.6% 감소했지만, 고흥군은 4.7%가 증가했다.  
군은 이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추진한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꼽았다.  
이 계획은 고흥사랑애 청년유턴, 아이행복, 귀향(귀농·귀어)귀촌 3대전략 50개 시책을 중심으로 청년유턴 정착장려

금과 부모 가업승계 지원, 귀농·귀촌 집들이비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청년도전 창업 지원, 원주민과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정책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유튜브,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홍보를 더욱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코로나19 확진’ 광주 34~41번 접촉자 총 291명

광주시, 254명 음성 판정...지역 확산 방지 위해 총력

주말 사이에 광주에서 8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가 이들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광주 34~41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291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254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7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들의 이동동선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동선과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과 접촉지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NEW  
황금빛출렁다리

NEW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군 Jangseong